

세대별 1인 가구의 특성과 과제

2016. 12. 8

장경수 선임연구원 (blueeye0704@daum.net)

요 약

1. 연구배경 및 목적 / 1
2. 1인 가구의 인구통계적 특성 / 4
3. 1인 가구의 소득·지출, 고용, 주거 특성 / 6
4. 정책적 시사점 및 과제 / 14

보고서 내용은 새누리당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요 약 》

- 1인 가구는 2000년 226만 가구(전체가구 대비 15.6%)에서 2015년 506만 가구(26.5%)로 급증하였고, 2035년에는 763만 가구(34.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본 연구는 1인 가구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경제적 특성(소득지출, 고용, 주거)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과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1인 가구의 인구통계적 특성
 - 첫째, 60대 이상의 고령층을 중심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음
 - 둘째, 미혼 및 이혼으로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음
 - 셋째, 여성 1인 가구가 증가 추세인데, 특히 20·30대에서 두드러짐
- 1인 가구의 소득지출, 고용, 주거 특성
 - (소득지출) 60대 이상 1인 가구는 미래 수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소비성향이 축소되고 있음(가처분소득이 작아 필수재적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 (고용) 60대 이상 1인 가구의 근로안정성이 가장 취약(단순노무직에 높은 분포)
 - (주거) 1인 가구가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월세 의존도가 현저히 높고, 특히 20·30대 1인 가구의 주거불안이 심각함
- 정책적 시사점과 과제
 - 첫째, 장기적으로 인구구조뿐만 아니라 가구구조 변화에 부합하는 주택·복지정책이 필요함
 - 둘째, 고령층 1인 가구의 근로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재취업 일자리 및 공공근로사업 등을 확대해야 함
 - 셋째, 주거불안이 높은 20·30대 1인 가구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산업 측면에서도 1인 가구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의 개발·보급을 통해 가구구조 변화에 부합하는 소비환경을 마련해야 함

1. 연구배경 및 목적

□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저소득층에 집중

○ 1인 가구의 비중이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

- 1인 가구는 2000년 226만 가구에서 2015년 506만 가구로 급증하고, 2035년에는 763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전망
- 2000~2035년 동안 1인 가구는 연평균 3.5%로 증가
-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5.6%에서 2015년 26.5%로 상승하였고, 2035년에는 34.3%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표 1> 1인 가구 비중 추이

(단위: 백만가구, %)

	2000년	2015년	2035년
1인 가구 수 (백만가구)	226	506	763
1인 가구 비중(%)	15.6	26.5	34.3

자료: 통계청, 『장래가구 추계』

○ 반면 2-3인 가구는 증가세가 둔화되고, 4인 이상 가구는 감소

- 2000~2035년 동안 2인 가구는 연평균 2.9%, 3인 가구는 연평균 1.0% 증가
- 같은 기간 4인 이상 가구는 뚜렷하게 감소 추세

<표 2> 가구원수별 가구 수 추이

(단위: 백만가구, %)

	2000년	2015년	2035년	2000-2035년 연평균 증감률(%)
1인 가구	2.3	5.1	7.6	3.5
2인 가구	2.8	5.0	7.6	2.9
3인 가구	3.0	4.0	4.3	1.0
4인 가구	4.5	3.5	2.2	-2.0
5인 가구	1.5	0.9	0.4	-3.5
6인 이상 가구	0.5	0.3	0.1	-3.9
전체	14.5	18.7	22.3	1.2

자료: 통계청, 『장래가구 추계』

- 1인 가구는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저소득층 비중이 높고, 중고소득층의 비중은 낮게 분포
 - 1인 가구의 저소득층 비중은 45.1%를 차지하는 반면, 2인 이상 가구는 10.9%에 불과함
 - 중고소득층의 비중은 1인 가구가 각각 41.8%, 13.0%인데 반해, 2인 이상 가구는 각각 63.4%, 25.7%로 상대적으로 높게 구성되어 있음

- 특히 고령층 1인 가구가 저소득층에 집중적으로 분포
 - 20·30대와 40·50대 1인 가구는 중소득층 비중이 각각 55.6%, 55.3%로 과반인 반면, 60대 이상 1인 가구는 저소득층 비중이 66.7%에 달함

-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5.6%로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OECD 평균 11.0%를 크게 상회
- 한국의 경우 50대 이전에는 안정적인 소득에 기반하여 중산층의 삶을 살지만, 50대 이후 고용안정성 감소와 노후 준비 부족으로 인해 취약 계층으로 전락되는 경향이 나타남

<표 3> 연령별 · 가구유형별 소득계층 비중(2015)

(단위: %)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전체
1인 가구	저소득층	17.2	21.9	66.7	45.1
	중소득층	55.6	55.3	30.1	41.8
	고소득층	27.2	22.9	3.2	13.0
2인 이상 가구	저소득층	4.6	5.5	30.7	10.9
	중소득층	73.2	62.6	55.6	63.4
	고소득층	22.2	31.9	13.7	25.7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주: 가구원수를 고려한 균등화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계층 분류(저소득층은 중위 소득의 50%미만, 중소득층은 50%이상 150%미만, 고소득층은 150% 이상을 의미)

-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1인 가구의 세대별 특성을 소득·지출 구조, 고용 구조, 주거 조건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2. 1인 가구의 인구통계적 특성

□ 60대 이상의 고령층을 중심으로 1인 가구 급증

○ 60대 이상의 노인인구를 중심으로 1인 가구 급증

- 1인 가구 중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현재 34.0%로 가장 높고, 20대(16.9%), 30대(17.3%), 40대(14.5%), 50대(16.1%)는 이에 크게 못 미침
- 60대 이상의 1인 가구의 비중은 2000년 31.3%에서 2015년 34.0%, 2035년에는 53.7%로 증가하고, 20대는 2000년 23.3%에서 2015년 16.9%, 2045년 10.6%로 하락할 전망
- 1인 가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가구구조의 변화와 함께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가 맞물리면서 독거노인가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됨

○ 미혼 및 이혼, 사별로 1인 가구 급증

- 미혼 1인 가구는 2000~2010년 동안 연평균 6.8% 증가하였고, 이혼 1인 가구는 같은 기간 연평균 9.8% 증가함
- 평균 결혼연령이 상승하면서 미혼 1인 가구가 증가하였고, 이혼 및 사별로 따른 노인 1인 가구가 급증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됨

□ 20·30대 여성 1인 가구 증가

○ 여성을 중심으로 1인 가구 증가

- 1인 가구 중 여성의 비중이 2010년 66.1%에서 2014년 69.0%로 증가하였고, 남성의 비중은 33.9%에서 31.0%로 감소
- 미혼 및 이혼의 증가,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 상승의 시대적 현상과 맞물려 여성 1인 가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

○ 특히 20·30대 여성을 중심으로 1인 가구 증가

- 고연령화 될수록 각 연령대별 1인 가구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경향이 있으나, 40·50대와 60대 이상의 경우 1인 가구 중 여성의 비중이 축소되는 반면 20·30대는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남
- 즉, 여성을 중심으로 1인 가구가 확대되고 있지만, 주로 20·30대 여성을 중심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줌

<표 4> 연령대별 1인 가구의 성별 분포

(단위: %)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2010년	→	2014년	2010년	→	2014년	2010년	→	2014년
남성	59.0	→	49.1	42.7	→	43.9	15.8	→	18.2
여성	41.0	→	50.9	57.3	→	56.1	84.2	→	81.8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3. 1인 가구의 소득·지출, 고용, 주거 특성

① 1인 가구의 소득·지출 구조 특성

○ 60대 이상 1인 가구는 미래 수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평균소비성향¹⁾ 축소

- 전체 1인 가구의 소비성향은 상승하나 60대 이상 1인 가구는 하락
 - 2010~2014년 동안 20·30대는 66.1%→73.6%, 40·50대는 57.7%→64.7%로 평균 소비성향이 상승한데 반해, 60대 이상 1인 가구는 90.5%→84.5%로 하락
 - 다른 연령대의 경우 소득 증가폭보다 소비 증가폭이 더 크지만, 60대 이상 1인 가구는 소비 증가폭이 크지 않아 평균소비성향이 축소
 - 60대 이상 1인 가구의 소비성향이 하락한 이유는 경기침체 지속과 이에 따른 고용불안으로 미래 안정적인 수입 확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비록 소득이 늘어도 소비를 경직적으로 지출
- 20·30대 및 40·50대 1인 가구에 비해 60대 이상의 가처분소득이 현저히 적고, 소비 증가폭도 가작 장음
 - 60대 이상 1인 가구의 월 가처분소득은 84만원으로, 20·30대 193만원, 40·50대 201만원 보다 현저히 적음
 - 60대 이상 1인 가구의 소득규모가 절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자립성이 떨어지고 필수재적 품목 이외의 소비활동이 어려워 삶의 질 하락으로도 연결됨

1) 평균소비성향 = $\frac{\text{소비지출액}}{\text{가처분소득}}$

<표 5> 1인 가구 월소득-지출 구조

(단위: %)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1인 가구 전체
가처분 소득	2010년	187.0	180.1	68.4	130.1
	2014년	192.7	201.1	83.9	136.7
	증감	5.6	21.0	15.4	6.6
소비 지출액	2010년	123.7	103.9	61.9	88.8
	2014년	141.9	130.2	70.9	100.4
	증감	18.2	26.3	9.0	11.5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60대 이상 1인 가구는 필수재 소비비중이 높고,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
 - 60대 이상 1인 가구는 소비지출액 중 식료품 지출비중(엔겔계수)이 20·30대 및 40·50대 1인 가구보다 높고, 증가 속도도 가장 빠름
 - 60대 이상 1인 가구의 엔겔계수는 2010~2014년 동안 23.2%→23.6%로 상승한 반면, 40·50대는 오히려 하락하였고, 20·30대도 소폭 상승에 그침
 - 1인 가구 전체의 엔겔계수는 2010~2014년 동안 15.2%→15.9%로 상승한 반면, 2인 이상 가구는 13.9%→13.8%로 오히려 하락
 - 60대 이상 1인 가구는 소비지출액 중 주거비 지출비중(슈바베계수)이 다른 연령대의 1인 가구보다 높고, 가장 큰 폭으로 상승
 - 2014년 60대 이상 1인 가구의 슈바베계수는 24.2%로 2010년 이후 1.6%p 상승하였고, 20·30대와 40·50대의 1인 가구의 상승폭을 크게 초과함

- 1인 가구 전체의 슈바베계수는 2010~2014년 동안 1.0%p 상승한 반면, 2인 이상 가구는 0.3%p 상승에 그침
- 독거노인가구는 필수재적 소비지출의 비중이 높아 식료품 가격 및 주거비 상승에 따른 경제적 고통이 크고, 부담을 더욱 크게 체감할 것으로 판단됨

<표 6> 1인 가구의 연령별 엔겔계수 및 슈바베계수

(단위: %)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2010년	→	2014년	2010년	→	2014년	2010년	→	2014년
엔겔계수	8.4	→	8.5	13.9	→	13.0	23.2	→	23.6
슈바베계수	17.8	→	18.4	17.8	→	17.9	22.6	→	24.2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주: 엔겔계수 = $\frac{\text{식료품 소비지출액}}{\text{총 소비지출액}}$, 슈바베계수 = $\frac{\text{주거관련 소비지출액}}{\text{총 소비지출액}}$

② 1인 가구의 고용 구조 특성

○ 60대 이상 1인 가구의 근로안정성 가장 취약

- 60대 이상 1인 가구는 다른 연령대 1인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 비중이 현격히 낮음
- 60대 이상 1인 가구의 취업비중은 2014년 32.0%로 과반수가 비취업 상태
- 20·30대 1인 가구의 취업비중은 개선되어 왔으나 2013년 이후 가파르게 하락하여 2014년 78.3%를 기록
- 40·50대 1인 가구의 취업비중은 2010년 76.9%에서 2014년 80.1%로 개선

<표 7> 1인 가구의 연령별 취업비중 추이

(단위: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30대 1인 가구	81.5	86.0	88.3	87.6	78.3
40·50대 1인 가구	76.9	80.4	79.2	77.5	80.1
60대 이상 1인 가구	31.8	30.8	33.5	33.0	32.0
1인 가구 전체	57.1	57.5	55.9	54.1	54.0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취업 상태일지라도 60대 이상 1인 가구는 근로안정성에서 다른 연령대 1인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를 띄고 있음
- 60대 이상 1인 가구는 임금근로자 중 임시·일용근로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자영업자 중에서도 영세자영업자 비중이 높음
- 반면 20·30대 1인 가구는 상용근로자 비중이 높고, 40·50대 1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자영업자인 고용주 비중이 높음

<표 8> 1인 가구의 연령별 종사상 지위(2014)

(단위: %)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1인 가구 전체
임금 근로자	상용 근로자	65.7	42.7	13.7	39.1
	임시·일용 근로자	17.8	33.2	66.0	40.0
자영업자	고용주	1.9	5.2	0.8	2.9
	자영자	14.6	18.8	19.6	18.0
합계		100	100	100	100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20·30대 1인 가구는 전문직·사무직에, 60대 이상 1인 가구는 단순노무직에 가장 높은 비중

- 20·30대 1인 가구는 전문직·사무직 종사자가 2인 이상 가구보다 높게 분포
 - 20·30대 1인 가구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비중이 34.5% 사무직 종사자 비중이 32.3%로 20·30대 2인 이상 가구의 가구주보다 높은 비중
 - 1인가구의 단순노무 종사자 비중(33.7%)이 2인 이상 가구(10.7%)보다 매우 높게 분포하지만, 20·30대인 경우 오히려 낮음
- 60대 이상 1인가구는 단순노무 종사자 비중이 2인 이상 가구보다 높게 분포
 - 60대 이상의 1인가구는 단순노무 종사자 비중이 71.5%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60대 이상 2인가구의 34.5%를 크게 초과
 - 40·50대 1인가구의 단순노무 종사자 비중도 24.0%로, 40·50대 2인 이상 가구의 7.7%를 초과
 - 1인가구는 연령대별로 근로조건 및 근로안정성 등의 측면에서 전혀 상이한 고용구조를 나타내고 있음

<표 9> 1인 가구의 가구유형별 · 연령대별 직업분포(2014)

(단위: %)

	20·30대 1인 가구	40·50대 1인 가구	60대 이상 1인 가구	1인 가구 전체
관리자	0.2	1.0	0	0.5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4.5	14.1	1.9	15.3
사무 종사자	32.3	9.2	1.9	12.7
서비스 종사자	7.4	16.2	8.4	11.5
판매 종사자	8.5	7.7	7.6	7.9
농림어업숙련 종사자	0.1	0	0.1	0
기능원 및 기능 종사자	5.4	13.3	3.3	8.1
기계 조작·조립 종사자	9.0	14.4	5.4	10.2
단순노무 종사자	2.3	24.0	71.5	33.7
직업군인	0.4	0	0	0.1
합계	100	100	100	100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주: 비취업자는 제외함

③ 1인 가구의 주거 형태 특성

- 1인 가구가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월세 의존도가 현저히 높고, 특히 20·30대 1인 가구의 주거불안이 심각
 - 1인가구는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주택소유비중이 낮고, 특히 20·30대가 가장 낮음
 - 1인가구의 주택소유비중은 52.0%로, 2인 이상 가구 71.8%를 크게 하회
 - 특히 20·30대 1인가구는 주택소유비중이 현저히 떨어져 다른 연령대의 1인 가구에 비해 주거불안 수준이 높음

- 1인가구는 2인 이상 가구 보다 월세의존도가 높고, 특히 20·30대의 주거불안이 가장 심각한 상황
- 1인가구의 자가거주 비중은 48.8%로, 2인 이상 가구의 67.4%보다 낮음
- 반면, 1인가구의 월세 거주 비중은 23.5%로 2인 이상 가구(10.9%)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
- 특히, 20·30대의 전월세 의존도가 가장 높아 상대적으로 주거불안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표 10> 1인 가구의 가구유형별 주택소유비중 및 입주형태(2014)

(단위: %)

		1인 가구				2인 이상 가구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전체	
주택소유비중		23.8	43.2	65.9	52.0	71.8
입 주 형 태	자가	23.1	37.3	63.3	48.8	67.4
	무상주택	7.9	5.2	9.9	8.2	2.9
	사택	0.6	1.6	0	0.6	0.6
	전세	31.4	17.9	11.4	16.8	16.7
	영구임대	0.3	4.7	1.5	2.2	1.6
	월세	36.7	33.3	13.9	23.5	10.9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월세 임차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20·30대 1인 가구에 가중

- 20·30대 1인가구의 임차료 지출 규모가 다른 연령대보다 큼
- 월세 거주하는 20·30대 1인가구의 임차료는 2014년 월평균 28만원으로, 40·50대(24만원) 및 60대 이상(17만원) 보다 큰 상황

- 전세공급 부족 현상으로, 임차 1인가구가 월세로 전환하고 임차료 지출 증가에 따른 주거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

<표 11> 1인 가구의 월세 임차료 추이

(단위: 만원)

	2010년	2014년
20·30대 1인 가구	24.0	27.7
40·50대 1인 가구	18.2	24.3
60대 이상 1인 가구	12.8	16.7
1인 가구 전체	19.4	22.8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4. 정책적 시사점 및 과제

- 첫째, 장기적으로 인구구조뿐만 아니라 가구구조 변화에 부합하는 주택·복지정책이 필요
 - 인구증가폭이 둔화되고 감소세로 전환될 것이며, 고령화에 따른 15~64세 생산가능인구의 부양부담이 가중되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서 정책적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가구구조 변화에 대한 인식 및 정책적 대응은 부족
 - 1인 가구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가족정책 및 사회적 안전망을 재점검하고, 3-4인 가구를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는 가족 정책을 제고하여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제고 필요
 - 특히,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20·30대 여성 1인 가구,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가구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책 강구
 - 사회참여율이 낮은 1인 가구의 경우 가족유대감이 유지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 개발을 통해 사회참여활동을 영유할 기회 제공
- 둘째, 고령층 1인 가구의 근로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재취업 일자리 및 공공근로사업 등을 확대해야 함
 - 60대 이상 1인 가구는 취업비중이 낮고, 상대적으로 근로조건 및 안정성이 떨어지는 고용구조를 가지고 있어 자립성이 떨어지는 상황

-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공공근로사업 및 가교일자리 등을 확대하여 사회참여 유도 및 소득여건을 개선
- 재취업 일자리 확대 및 일자리의 질적 개선을 통해 60대 이상 1인 가구가 안정적 소득에 기반하여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 일본, 독일 등 노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선진국 사례를 적용하여, 퇴직 고령자들에 대한 취업지원컨설팅, 시니어 인턴제, 고령층 연수제도 등을 활성화 할 필요

○ 셋째, 주거불안이 높은 20·30대 1인 가구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20·30대 1인 가구는 자가 보유 비중이 낮고, 월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보증금 마련 부담 및 임대료 지출 비용 증가에 따라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 대형 미분양 주택 등을 활용하여 20·30대 1인 가구에 맞춰진 초소형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
- 주거불안의 주요한 대상인 20·30대 1인 가구의 여건에 맞는 행복주택 공급을 확대할 필요
- 2015년 정부는 젊은 세대(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를 대상으로 한 행복주택 공급을 당초 20만호에서 15만호로 축소할 계획을 발표

- 넷째, 산업측면에서도 1인 가구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의 개발·보급을 통해 가구구조 변화에 부합하는 소비환경을 마련해야 함
 - 기업들은 늘어나는 1인 가구 추세에 맞게, 소량 상품, 소형가전, 소형 가구, 1인 전문 인테리어 등 적극적인 제품 개발
 - 재무설계 관리, 건강관리, 생활도우미 지원 등의 1인 가구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고, 외식업체도 배달서비스나 1인용 전용좌석 등의 1인 가구 맞춤형 소비환경을 마련할 필요
 - 특히, 20·30대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보안·치안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가구를 위한 돌봄 서비스 등의 사회서비스도 확대